2018. 1. 6. 경찰승진시험

# 실무 3


| 온라인 동영상 | (02) 6331-1009 | 자료제공 : 김재규 교수 | www.kimcodi.com |
|---|---|---|---|
| 서울 김재규경찰학원 | (02) 823-3112 | | |
|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| (062) 236-3112 | | |
| 안동 김재규공무원·경찰학원 | (054) 823-9112 | | |


**1** 정보의 질적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요약집 p.15

① 정확성(accuracy) –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.

② 관련성(relevancy) –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된 성질이다.

③ 적시성(timeliness) –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이다. 이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은 생산자의 생산시점이다.

④ 완전성(completeness) – 정보가 그 자체로서 정책결정에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있는 성질이다.

**해설**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.

③ 적시성(timeliness)이란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이다. 이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**사용자의 사용시점**이다.

**정답** ③

**2** 각 정보분류 기준에 따른 정보의 종류로 맞지 않은 것은? 요약집 p.16

①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– 전략정보, 전술정보

②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– 기본정보, 현용정보, 판단정보

③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– 적극정보, 소극(보안)정보

④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– 인간정보, 기술정보

**해설**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.

② 정보는 정보요소에 따라 **정치 · 경제 · 사회 · 군사 · 과학 · 산업정보로 분류된다.** 기본정보, 현용정보, 판단정보는 분석형태(기능)에 따른 분류이다.

**정답** ②

**3** EEI(첩보기본요소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요약집 p.22

① 통계표와 같이 공개적인 것이 많고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.

②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한다.

※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.kimcodi.com 에서 제공됩니다.

③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수집되어야 할 항시적 요구사항이다.

④ 정보기관의 활동은 주로 EEI에 의한다.

**해설**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.

④ 정보기관의 활동은 주로 SRI에 의한다.

[핵심정리] EEI(첩보기본요소)와 SRI(특별첩보요구)의 비교

| EEI(첩보기본요소) | SRI(특별첩보요구) |
|---|---|
| ①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첩보수집계획서의 핵심<br>② 전체적인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내용으로 계속적 · 반복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는 사항<br>③ 대부분 통계표와 같이 공개적인 것이 많고 문서화되어 사회연구기관에서 주로 담당<br>④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함<br>⑤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수집되어야 할 항시적 요구사항 | ① 임시적이고 돌발적이며 특수지역 내지 특수사항에 대한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첩보요구<br>② 수시로 단편적 사항에 대하여 명령되는 것이 원칙<br>③ 첩보수집지침은 사안과 대상에 따라 상이하며 비교적 구체성과 전문성이 요구<br>④ 사전수집계획서를 요하지 않고,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음<br>⑤ 통상 정보기관은 주로 SRI에 의하여 정보활동이 이루어짐 |

**정답** ④

**4** **정보배포의 원칙 중 보안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** 요약집 p.29

① 정보의 분류조치 – 주요문서와 같은 정보들을 여러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관리방법과 열람자격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유출을 막는 일련의 조치

② 인사보안조치 –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해당 정보들이 공무원이 될 자 또는 공무원에 의해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

③ 물리적 보안조치 – 문서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열람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, 관련 문서의 배포범위를 제한하거나 폐기 대상인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관리방법

④ 통신보안조치 – 정보의 배포수단으로 전선 · 전파 또는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

**해설**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.

③ 물리적 보안조치란 보호가치 있는 정보를 보관하는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그 시설에 대한 보안조치를 실시하는 방안들을 총칭한다. 문서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관련 정보나 문서를 열람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, 관련 문서의 배포범위를 제한하거나 폐기 대상인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관리방법은 정보의 분류조치이다.

**정답** ③

**5** **경찰정보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** 요약집 p.37

① '견문'이란 경찰관이 공 · 사생활을 통하여 보고 들은 국내외의 정치 · 경제 · 사회 · 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각종 보고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경찰관은 견문을 수집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.

② '정보상황보고'란 매일 전국의 사회갈등이나 집회시위 상황을 정리하여 그 다음 날 아침에 경찰 내부와 정부 각 기관에 전파하는 보고서이다.

③ 경찰의 정책정보는 사회갈등이나 집회시위와 관련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'예방적 상황정보'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 부처에서 생산하는 일반적인 정책보고서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.

④ '정보판단(대책)서'란 신고된 집회계획 또는 정보관들이 입수한 미신고 집회 개최계획 등을 파악하여 이 중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중요 집회에 대해 미리 작성하여 경비 · 수사 등 관련기능에 전파하는 보고서이다.

**해설**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.

② **'정보상황보고'**란 사회갈등이나 집단시위상황, 관련 첩보, 기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, 심지어는 발생이 우려되는 사안까지도 경찰 내부에 전파하고,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외부에도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. 매일 전국의 사회갈등이나 집회시위 상황을 정리하여 그 다음 날 아침에 경찰 내부와 정부 각 기관에 전파하는 것은 **중요상황정보라고 한다.**

**정답** ②

**6** **정보보고서를 작성할 때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와 설명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** 요약집 p.38

① 추정됨 –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현재 나타난 동향의 원인 · 배경 등을 다소 막연히 추측할 때 사용한다.

② 예상됨 – 어떤 징후가 나타나거나 상황이 전개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.

③ 판단됨 – 과거의 움직임이나 현재 동향, 미래의 계획 등으로 미루어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리라는 예측을 할 경우에 사용한다.

④ 전망됨 – 구체적인 징후는 없으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곤란하여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한 때 사용한다.

**해설** ① 이 지문이 가장 옳다.

[핵심정리] 정보보고서 작성시 사용되는 용어

| 구 분 | 내 용 |
|---|---|
| 판단(判斷)됨 | 어떤 징후가 나타나거나 상황이 전개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|
| 예상(豫想)됨 | 첩보 등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 비교적 확실한 경우 |
| 전망(展望)됨 | 과거의 움직임이나 현재의 동향, 미래의 계획 등으로 미루어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리라는 예측을 할 경우 |
| 추정(推定)됨 | 구체적인 근거 없이 현재 나타난 동향의 원인 · 배경 등을 다소 막연히 추측할 경우 |
| 우려(憂慮)됨 | 구체적인 징후는 없으나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여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한 경우 |

**정답** ①

※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.kimcodi.com 에서 제공됩니다.

**7** 「보안업무규정」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요약집 p.39

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·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.

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.

③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,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보안시설 · 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(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)과 공무원 임용 예정자,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.

**해설** ①②④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

③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**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**.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(동규정 제34조).

**정답** ③

**8**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요약집 p.49~

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(이하 '관할경찰관서장'이라 한다)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.

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. 다만,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,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(腕章)을 착용하여야한다.

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 ·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해설**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

② 동법 제4조

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**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**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(동법 제6조 제3항).

④ 동법 제8조 제2항

**정답** ③

**9**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요약집 p.53

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.

③ 이의 신청인은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.

④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.

**해설** ①①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

④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(동법 제9조 제4항).

**정답** ④

**10**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동법 시행령」 상 질서유지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요약집 p.54

①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.

②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.

③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.

④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손괴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·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
**해설** ①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· 제2항

③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

④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손괴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·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(동법 제24조 제3호).

**정답** ④

**11** 공산주의 이론 중 경제이론(마르크스의 경제이론)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요약집 p.72

| | |
|---|---|
| ㉠ 계급투쟁론 | ㉡ 자본축적론 |
| ㉢ 제국주의론 | ㉣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|
| ㉤ 국가사멸론 | |

① ㉠㉡ ② ㉡㉢
③ ㉠㉣ ④ ㉢㉤

**해설** ㉡㉢ 2 항목이 경제이론에 해당한다.

[핵심정리] 공산주의 이론체계

| 구 분 | | 내 용 |
|---|---|---|
| 철학이론 | 변증법 | • 量의 質化 및 그 逆의 법칙<br>• 대립물 통일의 법칙<br>• 부정의 부정 법칙 |
| | 유물론 | • 변증법적 유물론 |
| | 유물사관 | • 인류역사는 관념이 아닌 물질이며 계급투쟁이 근본 |
| 경제이론 | 노동가치설 | •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한 노동이 형성 |
| | 잉여가치설 | • 필요노동을 초과하는 노동에 의해 생산된 가치 |
| | 궁핍화 이론 | • 자본가의 부는 늘어나지만 노동자는 점차 궁핍화 |
| | 제국주의론 | • 제국주의에 이르면 독점이 심화된다는 주장 |
| | 자본주의 붕괴론 | • 자본축적의 법칙 → 자본집중의 법칙 → 빈곤증대의 법칙 |
| 정치이론 | 폭력혁명론 | • 공산화는 혁명적 수단인 폭력에 의해서만 가능 |
| |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| • 공산화는 부르주아 전복 후 프롤레타리아 독재 필요 |
| | 계급투쟁론 | • 유산계급과 무산계급간 끊임없이 투쟁 지속 |
| | 국가사멸론 | • 노동자 혁명 후 권력기관으로서의 국가도 일소 |

**정답** ②

**12** 남한의 「민족공동체 통일방안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요약집 p.83

① 6 · 15남북공동선언에서 거론된 '연합제안'이란 남북연합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「민족공동체통일방안」을 의미한다.

② 당장의 통일보다는 교류협력과 신뢰 회복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달성하려는 점진적 · 단계적 통일방안이다.

③ 1989년 국회 통일특별위원회의 공청회 등 국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채택되었으며, 이후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.

④ 통일의 원칙 중 '민주'란 무력에 의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으로 통일한다는 의미이다.

**해설**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.
④ 무력에 의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통일의 원칙 중 '평화'를 말한다.

**정답** ④

## 13 공산주의 전술의 형태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요약집 p.78

> 혁명세력이 무기를 들고 폭력으로 지배계급에 대항하여 정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혁명전술을 말한다. 레닌이 블랑키즘을 정식화하여 볼셰비키혁명 때 실현한 바 있으며, 지배세력의 군사조직이 약체일 경우에만 성공 가능성이 있다.

① 테러전술
② 무장봉기전술
③ 게릴라전술
④ 전위조직 및 침투전술

**해설** 설문은 무장봉기전술에 관한 설명이다.

**정답** ②

## 14 다음 방첩수단 중 적극적 방첩수단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요약집 p.93

> ㉠ 대상인물 감시
> ㉡ 보안업무 규정화
> ㉢ 입법사항 건의
> ㉣ 양동간계 시위
> ㉤ 첩보공작 분석

① ㉠㉤
② ㉡㉢
③ ㉠㉣
④ ㉡㉤

**해설** ㉠㉤ 2 항목이 적극적 방첩수단에 해당한다.
[핵심정리] 방첩의 수단

| 구 분 | 내 용 |
|---|---|
| 적극적 방첩수단 | ① 침투되어 있는 적 및 적의 공작망을 분쇄하기 위하여 취하는 공격적 수단(대간첩행위, 대태업행위, 대전복행위)<br>② 적에 대한 첩보수집, 적의 첩보공작분석, 대상인물 감시, 침투공작전개, 역용공작, 간첩신문 등이 이에 해당함 |
| 소극적 방첩수단 | ① 적의 비밀공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체보안의 기능을 발휘하는 방어적 수단<br>② 정보 및 자재보안의 확립, 인원보안의 확립, 시설보안의 확립, 보안업무 규정의 확립 등이 이에 해당함 |
| 기만적 방첩수단 | ① 비밀이 적에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한 바를 적이 오인하도록 방해하는 수단<br>② 허위정보의 유포, 유언비어의 유포, 양동간계시위(陽動奸計示威, 자기편의 작전 의도를 숨기고 적의 판단을 혼란하게 하기 위하여 본래의 작전과는 다른 어떤 행동을 눈에 띄게 드러내어 상대방을 속이는 전술) 등이 이에 해당함 |

**정답** ①

**15** 공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요약집 p.100

① '합동공작'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정보기관이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협동으로 비밀공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'연락공작' 또는 '연합공작'이라고도 한다.
② 공작의 4대 요소는 주관자, 공작목표, 공작원, 공작금이다.
③ 공작은 그 목적에 따라 첩보수집공작 · 태업공작 · 지원공작 · 와해모략공작으로 분류할 수 있다.
④ 공작은 지령, 계획, 모집, 훈련, 브리핑, 파견 및 귀환, 디브리핑, 보고서 작성, 해고의 과정을 거친다.

**해설** ①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정보기관이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협동으로 비밀공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'연락공작' 또는 '연합공작'이라고도 하는 것은 **통합공작**이다. 합동공작이란 우방국가 정보기관들이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개별적인 공작을 사안별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.
②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.

**정답** ①

**16** 심리전의 수단인 전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요약집 p.108

① 심리전의 주체가 의도한 선전 내용을 간단히 문자, 그림, 사진 등으로 수록한 유인물을 전단이라고 한다.
② 목적에 따라 전략전단, 전술전단, 선무전단으로 구분된다.
③ 선무전단은 점령지역이나 수복지역에 살포되는 것으로서, 질서확립 · 협조심 고취 등의 목적으로 일방적이고 명령적인 것이 많다.
④ 전략전단은 특정 상황 하에서 적측 인원의 태도와 행동에 즉각적인 영향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된다.

**해설**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.
④ 전략전단은 대상집단의 가치관을 파괴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며, 지도층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사용된다. 특정 상황 하에서 적측 인원의 태도와 행동에 즉각적인 영향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술전단이다.

**정답** ④

**17** 선전의 종류 중 흑색선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요약집 p.107

㉠ 국가 또는 공인된 기관이 공식보도기관을 통해서 행하며 주제의 선정과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.
㉡ 적 내부에 모순이 있음을 드러내어 조직을 분열 · 혼란시켜 사기를 저하시킨다.
㉢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으로, 선전이라는 선입견을 주지 않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.
㉣ 적국 내에서도 수행할 수 있고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
㉤ 선전의 신뢰도가 가장 높다.

① ㉠㉢ ② ㉡㉣
③ ㉢㉣ ④ ㉣㉤

**해설** ㉡㉣ 2 항목이 옳다.

[핵심정리] 선전의 종류와 장단점

| 형 태 | 의의와 장단점 | | |
|---|---|---|---|
| 백색선전 | 출처를 공개하고 행하는 선전 | 장점 | 주제의 선정과 용어 사용에 제한을 받지만 신뢰도가 높음 |
| | | 단점 | 적국 내에서는 할 수 없음 |
| 흑색선전 | 출처를 위장하고 행하는 선전 | 장점 | 선전내용을 임의로 할 수 있고, 적국 내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며, 특수목표를 대상으로 특정한 계층에 대해 즉각적으로 집중적인 선전을 할 수 있음 |
| | | 단점 | 정상적인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고, 출처노출 방지를 위한 지나친 주의가 요구됨 |
| 회색선전 |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 | 장점 | 선전이라는 선입관을 주지 않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음 |
| | | 단점 | 적이 회색선전이라는 것을 감지하여 역선전을 할 경우 대항이 어렵고, 출처를 은폐하면서 선전의 효과를 거두기가 곤란함 |

**정답** ②

## 18 「국가보안법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요약집 p.113

① '반국가단체'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.

② 특수직무유기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친족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③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. 다만,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.

④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(양형의 조건)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.

**해설** ①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

② 동법 제11조

③ 「국가보안법」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. 다만,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(동법 제15조 제1항).

④ 동법 제20조 제1항

**정답** ③

## 19 「국가보안법」 제5조(자진지원 · 금품수수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요약집 p.117

① 제5조 제1항(자진지원)의 경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는 주체가 될 수 없다.

② 제5조 제1항(자진지원)의 경우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③ 제5조 제2항(금품수수)의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하여야만 성립한다.

④ 제5조 제2항(금품수수)의 경우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과 관련이 있어야만 성립한다.

**해설** ① 제5조 제1항(자진지원)의 경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이외의 자가 행위의 주체이므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는 주체가 될 수 없다(아래 조문 참고, 다음 해설도 같다).

② 제5조 제1항(자진지원)의 경우 행위자에게 **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.**

③ 제5조 제2항(금품수수)의 경우 **국가의 존립 ·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** 금품을 수수하여야만 성립한다.

④ 제5조 제2항(금품수수)의 경우 **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과 관련이 없더라도** 성립할 수 있다.

| 국가보안법(2016. 1. 6. 법률 제13722호로 일부개정된 것) |
|---|
| 제5조【자진지원 · 금품수수】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.<br>② 국가의 존립 ·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<br>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<br>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|

**정답** ①

**20** **「국가보안법」 상 일부조항에는 '국가의 존립 ·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'라고 하여 소위 '이적지정(利敵知情)'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들이 있다. '이적지정'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범죄로 가장 적절한 것은?** 요약집 p.114

①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(금품수수)

②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(단순잠입 · 탈출)

③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(회합 · 통신등)

④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(편의제공)

**해설** ①②③ 모두 '이적지정(利敵知情)'을 구성요건으로 한다(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, 제6조 제1항, 제8조 제1항).

④ 제9조 제2항의 편의제공죄는 「국가보안법」 **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**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· 회합 · 통신 ·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 성립한다(동법 제9조 제2항). 이 범죄는 '이적지정(利敵知情)'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.

**정답** ④

**21** 「보안관찰법」 상 보안관찰처분 결정절차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요약집 p.125

| | |
|---|---|
| ㉠ 대상자의 신고 | ㉡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|
| ㉢ 보안관찰처분 사안의 조사 | ㉣ 보안관찰처분 사안의 송치 |
| ㉤ 보안관찰처분의 결정 | |

① ㉠ → ㉡ → ㉢ → ㉣ → ㉤
② ㉠ → ㉡ → ㉢ → ㉤ → ㉣
③ ㉠ → ㉢ → ㉣ → ㉤ → ㉡
④ ㉠ → ㉢ → ㉣ → ㉡ → ㉤

**해설** 보안관찰처분의 결정 절차는 ㉠ 대상자의 신고 ㉢ 보안관찰처분 사안의 조사 ㉣ 보안관찰처분 사안의 송치 ㉡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㉤ 보안관찰처분의 결정 그리고 기간의 갱신 순서로 이루어진다.

**정답** ④

**22** 「보안관찰법」 및 「동법 시행령」 상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에 대한 설명이다. 아래 ㉠부터 ㉣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(O, X)가 바르게 된 것은? 요약집 p.129

㉠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처분을 한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㉡ 검사는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㉢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월내에 보안관찰처분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㉣ 검사는 면제결정을 받은 자가 그 면제결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면제결정 취소를 할 수 있다.

① ㉠ × ㉡ × ㉢ O ㉣ ×
② ㉠ O ㉡ O ㉢ × ㉣ ×
③ ㉠ × ㉡ × ㉢ × ㉣ ×
④ ㉠ O ㉡ × ㉢ × ㉣ O

**해설** ㉠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**관할경찰서장에게**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(보안관찰법시행령 제14조 제1항).
㉡ 검사는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**20일 이내에**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(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).
㉢ 법무부장관은 요건을 갖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**3월 내에** 보안관찰처분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(동법 제11조 제2항).
㉣ 면제결정을 받은 자가 그 면제결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**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**(동법 제11조 제4항).

**정답** ③

**23**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요약집 p.131

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법무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,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(이하 '방문증명서'라 한다)를 소지하여야 한다.

② 방문증명서는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(이하 '복수방문증명서'라 한다)가 있고,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③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 · 통신,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.

④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「여권법」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.

**해설**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**통일부장관의**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, **통일부장관이** 발급한 증명서(이하 '방문증명서'라 한다)를 소지하여야 한다(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).

②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**5년 이내로 하며,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**(동법 제9조 제3항).

③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 · 통신,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**통일부장관에게**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(동법 제9조의2 제1항).

④ 동법 제10조

**정답** ④

**24**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의 내용 중 ㉠부터 ㉣까지 ( ) 안에 들어갈 용어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요약집 p.136

> 시행령 제42조(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)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( ㉠ )이나 ( ㉡ )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>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( ㉢ ),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과 ( ㉣ )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① ㉠ 국방부장관 ㉡ 경찰청장 ㉢ 국방부장관 ㉣ 법무부장관

② ㉠ 국방부장관 ㉡ 국가정보원장 ㉢ 법무부장관 ㉣ 국방부장관

③ ㉠ 법무부장관 ㉡ 경찰청장 ㉢ 국방부장관 ㉣ 법무부장관

④ ㉠ 법무부장관 ㉡ 국가정보원장 ㉢ 법무부장관 ㉣ 국방부장관

**해설**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**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**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(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).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**국방부장관**, 국가정보원장

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(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).

**정답** ①

## 25 다자간 협상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요약집 p.142

① Blue Round(노동라운드) –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의한 사회적 덤핑을 규제한다.

② Technology Round(기술라운드) – 선진국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개도국의 연대 움직임으로, 주로 지적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.

③ Competition Round(경쟁라운드) – 각국의 국내규제와 정책 차이가 무역장애로 대두됨에 따라 개방과 내국인 대우를 통한 경제조건의 평균화를 추진한다.

④ Green Round(환경라운드) – 엄격한 환경기준을 가진 선진국들이 자국의 통상 관련 입법을 통하여 생태적 덤핑을 규제하는 것으로, 때로는 일방적 무역제한 조치로 통상 분쟁을 초래하기도 한다.

**해설**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.

② Technology Round(기술라운드)란 개발도상국의 기술경쟁력의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선진국의 연대 움직임을 말한다.

[핵심정리] 다자간 협상의 종류

| 구 분 | 내 용 |
|---|---|
| 환경라운드 (Green Round) | 엄격한 환경기준을 가진 선진국들이 자국의 통상관련 입법을 통하여 생태적 덤핑을 규제하는 것을 우루과이 라운드에 비견하여 일컫는 말로, 때로 일방적 무역제한조치로 통상분쟁을 초래하기도 한다. |
| 노동라운드 (Blue Round) |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의한 사회적 덤핑을 규제하는 것이다. |
| 기술라운드 (Technology Round) | 개발도상국의 기술경쟁력의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선진국의 연대 움직임으로 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중점을 둔다. |
| 경쟁라운드 (Competition Round) | 각국의 국내규제나 정책의 차이가 무역장애로 등장함에 따라 개방과 내국인 대우를 통한 경제조건의 평균화를 추진한다. |

**정답** ②

## 26 국제질서에 대한 주요견해와 그에 대한 설명이 연결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요약집 p.142

① Hobbes적 견해 – 국가 간의 관계는 항시 투쟁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규율과 국제기구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.

② Grotius적 견해 – 국제정치의 요체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국가라는 제도를 종식시키고 인류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.

③ Kant적 견해 – 모든 국가는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전쟁은 생존을 위한 대외전략의 하나로서 아무런 도덕적 또는 법적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.

④ Grotius적 견해 – 국제정치의 요체는 주어진 국제사회의 질서 속에서 상호공존과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.

**해설** ④ 이 지문이 가장 옳다.

[핵심정리] 국제질서에 관한 주요 견해

| 학 자 | 견 해 |
|---|---|
| Hobbes | • 자연상태의 인간은 '만인 對 만인의 투쟁'이라는 Hobbes의 견해를 국제정세에 적용<br>• 모든 국가는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전쟁은 생존을 위한 대외전략의 하나로서 아무런 도덕적 또는 법적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 |
| Kant | • 국제정치의 본질은 국가 간의 분쟁이 아니라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'초국가적 유대감'에 있다고 해석<br>• 국제정치의 요체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국가라는 제도를 종식시키고 인류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 |
| Grotius | • 국가 간의 관계는 항시 투쟁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규율과 국제기구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주장<br>• 국제정치의 요체는 주어진 국제사회의 질서 속에서 상호공존과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 |

**정답** ④

## 27 인터폴(INTERPOL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요약집 p.145

① 회원국 간 협력의 기본 원칙 중 '보편성'이란 모든 회원국은 재정분담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.

② 인터폴의 공용어는 영어, 독일어, 스페인어, 아랍어이다.

③ 회원국 간의 협력의 종류에는 범죄수사 협력,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, 군사적 · 정치적 분야에서의 협력이 있다.

④ 집행위원회(Executive Committee)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총재는 4년, 3명의 부총재 및 집행위원은 3년 임기로 각각 선출된다.

**해설** ① '보편성'이란 모든 회원국은 타 회원국과 협력할 수 있으며, 지리적 · 언어적 요소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. 모든 회원국은 재정분담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'평등성'을 말한다.

② 인터폴의 공용어는 영어, 불어, 스페인어, 아랍어이다.

③ 인터폴 회원국 간에는 정치, 군사, 종교 및 인종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여나 활동도 금지하고 있다.

④ 옳은 설명이다.

**정답** ④

**28** 「여권법」 상 여권발급 등의 거부 ·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요약집 p.158

> 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
> ㉡ 「여권법」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> ㉢ 장기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어 국외에 있는 사람
> ㉣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· 질서유지나 통일 · 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

① ㉠㉡ ② ㉠㉣
③ ㉡㉢ ④ ㉡㉣

**해설** ㉠㉣ 2 항목이 여권발급 등의 거부 ·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(여권법 제12조 제1항).

[핵심정리] 여권 발급 · 재발급 거부 사유(여권법 제12조 제1항)

> 1. ㉠ 장기 2년 이상의 형(刑)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 ·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
> 2.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> 3.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> 4. ㉣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· 질서유지나 통일 · 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> 가.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
> 나. 「보안관찰법」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

**정답** ②

**29** 「출입국관리법」 상 상륙의 종류와 상륙허가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㉠부터 ㉤까지 ( )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(단, 필요요건과 절차는 갖추어졌으며, 연장은 없는 것으로 본다)

요약집 p.160

> ㉠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승무원 – ( )일 이내
> ㉡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(승무원을 포함한다)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– ( )일 이내
> ㉢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외국인승무원 – ( )일 이내
> ㉣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(승무원을 포함한다)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 – ( )일 이내

㉤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「난민법」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 · 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– ( )일 이내

① 153 ② 168
③ 180 ④ 205

**해설** ㉠ 15 ㉡ 30 ㉢ 15 ㉣ 30 ㉤ 90으로 숫자의 합은 180이다(출입국관리법 제14조부터 제16조의2).

[핵심정리] 외국인 상륙의 종류 등(출입국관리법 제14조부터 제16조의2)

| 구 분 | 내 용 | 기간 | 허가권자 |
|---|---|---|---|
| 승무원 상륙허가 |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이 신청한 경우<br>1.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외국인승무원<br>2.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승무원 | 15일 범위 | 출입국 관리공무원 |
| 관광 상륙허가 |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한 경우 | 3일 범위 | 〃 |
| 긴급 상륙허가 |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(승무원을 포함한다)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어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신청한 경우 | 30일 범위 | 〃 |
| 재난 상륙허가 |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(승무원을 포함한다)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어 선박등의 장, 운수업자,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이 신청한 경우 | 30일 범위 | 지방출입국 · 외국인 관서의 장 |
| 난민 임시상륙허가 |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「난민법」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 · 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(庇護)를 신청한 경우 | 90일 범위 | 〃 |

**정답** ③

## 30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요약집 p.164

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입국금지 해당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자이다.

③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 · 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 · 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
④ 출국심사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외국인은 출국의 정지 대상자이다.

**해설** ①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, 제94조 제8호
② 동법 제46조 제1항 제3호
③ 동법 제52조 제1항
④ 출국심사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외국인은 **강제퇴거 대상자이다**(동법 제46조 제1항 제11호).

**정답** ④

## 31 외교사절의 파견절차에 대한 순서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요약집 p.169

① 아그레망요청 → 임명 → 신임장 부여 → 파견
② 아그레망요청 → 파견 → 임명 → 신임장 부여
③ 임명 → 아그레망요청 → 파견 → 신임장 부여
④ 임명 → 신임장 부여 → 파견 → 아그레망요청

**해설** 외교사절의 파견절차는 일반적으로 아그레망요청, 임명, 신임장 부여, 파견 순서로 이루어진다.

**정답** ①

## 32 다문화 사회의 접근유형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?

요약집 p.186

>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다수민족과 소수민족간의 차별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체하나, 다문화주의를 정치적 자결권부여로 해석하지 않는다. 이러한 입장은 다문화주의를 소수인종과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기회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을 접근한다.

①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
② 다원주의
③ 동화주의
④ 급진적 다문화주의

**해설** 설문은 동화주의에 관한 설명이다.
[핵심정리] 다문화사회의 접근 유형

| 구 분 | 내 용 |
|---|---|
|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(multicultural) | ① 동화주의(assimilationism)라고도 한다.<br>② 자유주의적 접근은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다수민족과 소수민족 간의 차별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체하나, 다문화주의를 정치적 자결권부여로 해석하지는 않는다.<br>③ 이러한 입장은 다문화주의를 소수 인종과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기회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에 접근한다. |

| | |
|---|---|
| 급진적 다문화주의 | ① 다문화주의는 '차이에 대한 권리'로 해석되며, 다문화주의는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(cultural rights)와 결부되어 이해된다.<br>② 주류사회의 양식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움직임으로 소수민족에 의한 문화주의를 의미한다.<br>③ 수집단이 자결(self-determination)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. |
|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(corporate multicultural) | ① 다원주의라고도 한다.<br>②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적 형태이다.<br>③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.<br>④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, 소수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 · 법적 원조를 한다. |

**정답** ③

## 33 국제회의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요약집 p.191

① Meeting - 모든 종류의 회의를 지칭하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이다.

② Seminar - 주로 교육목적을 띤 회의로 30명 이하의 참가자가한 사람의 주도 아래 특정분야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의 토론을 통하여 결론에 이르는 회의 형식이다.

③ Panel Discussion - 청중 앞에서 수명의 연사들이 사회자의 주도 아래 견해를 발표하거나 주장 · 반박의 형태로 진행되며, 청중도 연사에게 질의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기회가 주어진다.

④ Symposium - 토의 형식은 Forum과 유사하지만, 청중에게는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.

**해설** ④ 이 지문은 옳지 않다.

[핵심정리] 국제회의의 종류

| 구 분 | 내 용 |
|---|---|
| Meeting | 모든 종류의 회의를 지칭하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이다. |
| Conference (Convention) | 국제기구의 정기집회 등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회의를 말하며, Conference는 Convention에 비해 회의 진행상 참가자들 간 토론회가 많이 열리고 Convention은 다수의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. |
| Forum | 제시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청중 앞에서 벌이는 공개 토론회로서 청중도 질의에 참여하고 사회자가 의견을 종합하는 형태이다. |
| Symposium | 토의 형식은 Forum과 유사하지만, 청중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. |
| Panel Discussion | 청중 앞에서 수명의 연사들이 사회자의 주도 아래 견해를 발표하거나 주장 · 반박의 형태로 진행되며, 청중도 연사에게 질의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기회가 주어진다. |

| | |
|---|---|
| Seminar | 주로 교육목적을 띤 회의로 30명 이하의 참가자가 한 사람의 주도 아래 특정 분야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의 토론을 통하여 결론에 이르는 회의 형식이다. |

**정답** ④

**34** 「범죄인 인도법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요약집 p.221

㉠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㉡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인도조약 또는 이 법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㉢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(청구국이 아닌 외국)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필요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.
㉣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, 무기징역, 무기금고,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.

① ㉠㉡ ② ㉠㉢
③ ㉡㉢ ④ ㉡㉣

**해설** ㉠㉡ 2 항목이 옳다.
㉠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5호
㉡ 동법 제12조 제1항
㉢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(청구국이 아닌 외국)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**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**(동법 제9조 제4호).
㉣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, 무기징역, 무기금고, **장기 1년 이상의**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(동법 제6조).

**정답** ①

**35**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요약집 p.224

① 청색수배서(Blue Notice) – 수배자의 신원 · 전과 및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
② 녹색수배서(Green Notice) –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
③ 황색수배서(Yellow Notice) –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가명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
④ 자주색수배서(Purple Notice) –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

**해설** 황색수배서(Yellow Notice)는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수배서이다.

[핵심정리] 국제수배서의 종류

| 구 분 | 내 용 |
|---|---|
| 적색수배서 (Red Notice) |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 |
| 청색수배서 (Blue Notice) | 주로 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위해 발행 |
| 녹색수배서 (Green Notice) |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사전에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 |
| 황색수배서 (Yellow Notice) |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 |
| 흑색수배서 (Black Notice) |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 |
| 장물수배서 (Stolen Property Notice) | 도난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나 문화재 등에 대해 수배하는 것으로 상품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발행 |
| 자주색수배서 (Purple Notice) | 세계 각국에서 범인들이 범행시 사용한 새로운 범죄수법 등을 사무총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, 각 회원국에 배포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범죄예방과 수사자료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 교육기관의 교육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발행 |
| 오렌지 수배서 (Orange Notice) |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2004년부터 폭발물, 테러범(위험인물) 등에 대한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(국제수배자 조회 등을 통해 검거된 테러용의자 및 배후조직에 대한 정보를 입수) |
| INTERPOL-UN 수배서 | 인터폴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협력하여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발행 |

**정답** ③

**36** **지역사회 경찰활동(Community policing)의 내용 중 대역적 권위(Stand-in authority)에 의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** 요약집 p.241

① 사회영역에서 공식적이고 명백한 권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비공식적 또는 관행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관여하는 경찰활동이다.
② 경찰의 24시간 근무와 지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조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것이다.
③ 법적 근거를 가진 사회봉사활동 기관의 활동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.
④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.

**해설**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.
② 경찰의 24시간 근무와 지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조직 특성 등 때문에 발생하므로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것이다.

**정답** ②

**37** 전문직업의 윤리적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요약집 p.243

> ㉠ 학자들이 제시하는 전문직업의 윤리적 문제점으로는 차별, 부권주의,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, 소외 등이 있다.
> ㉡ '차별'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.
> ㉢ '소외'는 전문직이 되는 데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,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.
> ㉣ '부권주의'란 아버지가 자식의 문제를 모두 결정하듯이 전문가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.

① ㉠㉢ ② ㉡㉢
③ ㉠㉣ ④ ㉡㉣

**해설** ㉠㉣ 2 항목이 옳다.

[핵심정리] 전문직업화의 문제점

| 문제점 | 특 징 |
|---|---|
| 부권주의(父權主義)<br>(paternalism) | 아버지가 자식의 문제를 모두 결정하듯이 전문가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함 |
|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<br>(exploitation) | 전문직들은 그들의 지식과 기술로 상당한 사회적 힘을 소유함. 그러나 이러한 힘을 때때로 공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이용하기도 함 |
| 소 외<br>(alienation) |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함 |
| 차 별<br>(discrimination) | 전문직이 되는 데 장기간의 교육과 비용이 들어,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함 |

**정답** ③

**38**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3항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. 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요약집 p.251

① 공직자등의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이 제공하는 금품등
②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· 격려 ·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
③ 특정 대상자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·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
④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, 숙박, 음식물 등의 금품등

**해설** ①②④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

③ **불특정 다수인에게**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·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이라고 해야 옳다(동법 제8조 제3항 제7호).

|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2016. 5.29. 법률 제14183호로 일부개정된 것) |
|---|
| 제8조【금품등의 수수 금지】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· 후원 ·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<br>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<br>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<br>1.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· 격려 ·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<br>2.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·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· 경조사비 ·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<br>3. 사적 거래(증여는 제외한다)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(權原)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<br>4. 공직자등의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이 제공하는 금품등<br>5.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· 동호인회 · 동창회 · 향우회 · 친목회 · 종교단체 ·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·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·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<br>6.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, 숙박, 음식물 등의 금품등<br>7.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·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<br>8. 그 밖에 다른 법령 ·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|

**정답** ③

**39** **경찰 부패의 현상 및 원인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** 요약집 p.246

① '썩은 사과 가설'은 경찰 부패의 원인으로 자질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.

② 윌슨(Wilson)은 "미국 시카고 시민이 시카고 경찰을 부패시켰다."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것으로 '전체사회 가설'에 해당한다.

③ 펠드버그(Feldberg)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'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'은 비현실적이고, 더 나아가 경찰인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였다.

④ 코헨(Cohen), 펠드버그(Feldberg)가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'구조원인 가설'이다.

**해설**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.
④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'구조원인 가설'은 니더호퍼, 로벅, 바커 등이 주장하였다.

**정답** ④

**40** 「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요약집 p.266

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.
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직 · 간접적 경비, 장소, 인력 또는 물품 등의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, 자신의 직계 존속 · 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· 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④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해설**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
② 동강령 제16조의2
③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, 자신의 직계 존속 · 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· 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**직근 상급자**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동강령 제5조 제1항).
④ 동강령 제15조 제2항

**정답** ③